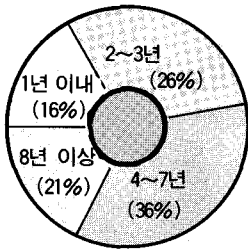


환경관리인 800인에게서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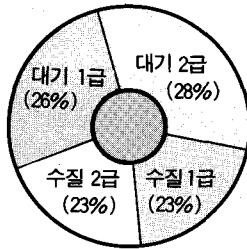
환경관리인, 地自制후 환경개선에 '회의적'

본 연합회에서는 지난해 연말 각 지역협의회별로 치러진 송년모임행사에 참석한 회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 설문은 전담부서설치나 양벌규정문제 등 회원들의 현안문제를 비롯해 그린벨트보호나 지자체실시후의 환경문제 등 환경전반에 관한 폭 넓은 의식을 고찰했다.

(편집자)



근무 년수별 구분



자격분야별 구분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환경관리인들은 경기협의회 1백26명, 대구협의회 1백12명 등 전국 11개지역협의회 회원들로 총 8백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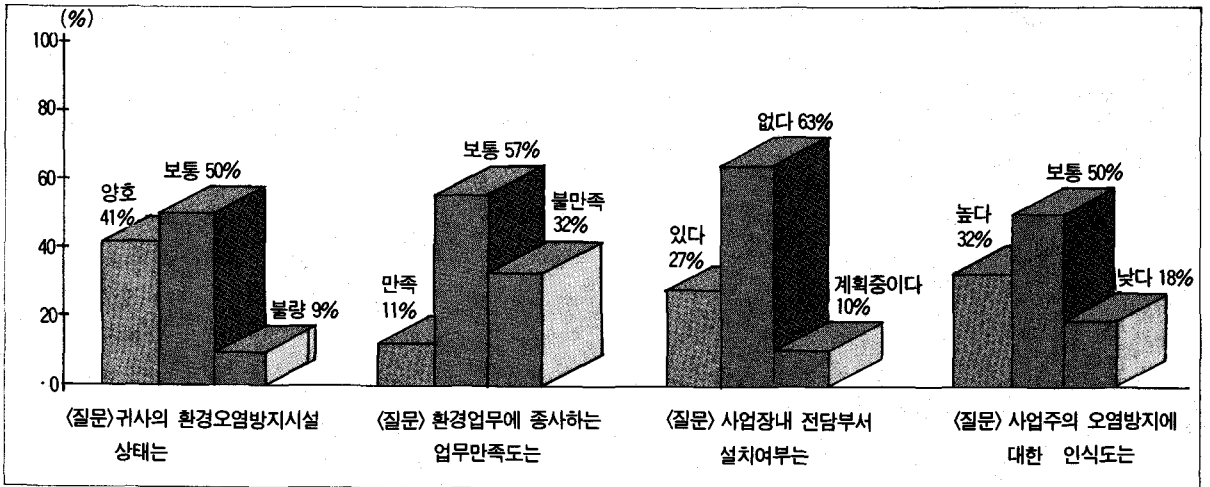
이들 환경관리인의 경력사항은 편의상 근무년수 1년미만(16%), 2-3년(26%), 4-7년(36%), 8년이상(21%)등 4개 부분으로 분류했다. 또한 자격증분야는 대기1급 26%, 대기2급 28%, 수질1급 23%, 수질2급 23%의 분포를 보였다.

설문내용은 총 20개문항으로 내용별로는 크게 4群으로 구분된다. 첫째 환경관리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업체에서의 만족도 및 근무현황, 둘째는 당국의 지도단속과 관련된 문제, 셋째로 당국의 환경정책과 국민들의 환경보전인식수준을 물었고 마지막으로 그린벨트보호와 지방자치제가 환경개선에 미칠영향 등 국민적관심을 모으고 있는 환경전반에 관한 질문들이었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업장내에서의 환경관리인들의 업무만족도는 보통이 57%, 「불만족」이 32%로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직도 사업장내에 전담부서설치가 부진하여 사내에서의 위상정립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과 양벌규정으로 인한 불확실한 신분보장문제 등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내에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있느냐는 질문에 27%만이 「있다」고 응답한 것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사업주의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인식도 즉 환경개선을 위한 의견을 건의했을때의 기업



주의 호응도를 묻는 질문에는「높다」가 32%, 「보통이다」가 50%, 「낮다」는 18%를 나타냈다.

한편 환경오염에 연관된 각종 사고에 대해 기업주와 환경관리인이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현행 환경관련법에 명문화되어있는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9%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지난해 2월 개최했던 본회 정기총회때 채택했던 5개항의「환경처장관에게 드리는 건의문」에서도 이의 폐지나 개선 등 제도적 보완책을 건의한 바 있다. 즉 환경관리인들의 본연의 임무인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운영, 관리하는것외의 분야는 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양벌규정이 악용된 첫 사례는 지난 86년 K공업사의 박운석관리인의 경우다. 그는 취직되었을 당시부터 시설보완을 건의했으나 묵살되었을 뿐 아니라 폐수처리에 필요한 약품마저 공급이 되지않아 결국 중금속폐수 배출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이후 기업주는 5백만원의 벌금형으로 간단히 처리되었으나 박관리인은 구속되고 말았다. 희생양이 된 관리인을 위해 본회에서는 법정투쟁을 벌이는 한편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펼쳐 마침내 1백50만원의 벌금형으로 그를 석방시켰었다. 이외에도 공식적으로 표면화되진않았지만 「양벌규정」으로 피해를 본 관리인들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엔 '60년대에 이와 비슷한 규정을 채택했다가 폐지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선

응답자의 78%가

기술상담 및 계몽보다는

지도단속이 앞서고 있음을 지적했으며,

양벌규정 역시 79%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를 기존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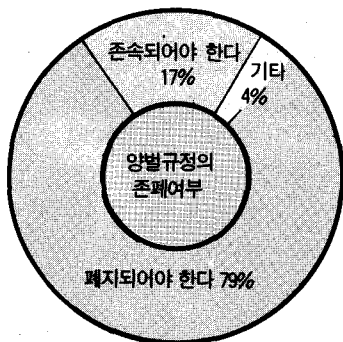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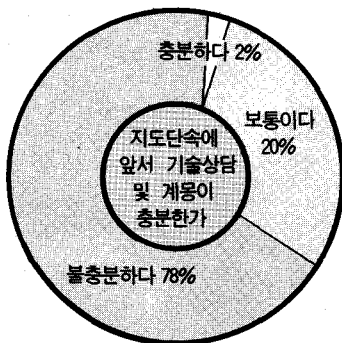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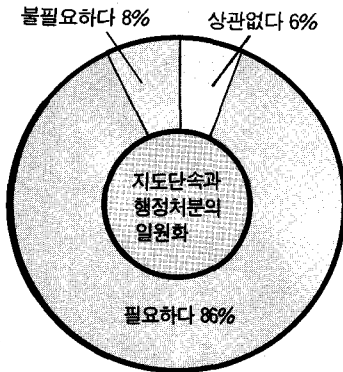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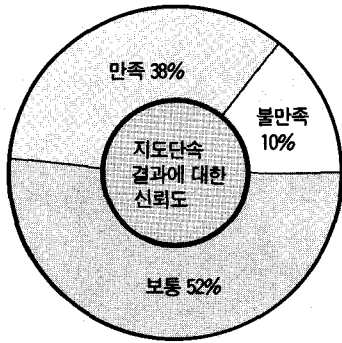
그동안 개선의 여지가 많아

환경인들의 현안문제로

제기됐던 제반사항들이

여전히 담보상태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지도단속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52%가 「보통이다」, 10%가 불만족을 나타냈으며 「만족한다」는 의견은 38%를 나타냈다. 특히 배출업체의 오염물질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는 12%만이 「믿을만 하다」고 대답했을 뿐 나머지 88%는 「보통이거나 믿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부분에 대해서 관리인들은 당국과 기업이 오염물질 측정치에 대해 서로 견해차가 크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당국이 발표하는 국내의 환경오염측정치에 대한 신뢰도면에서는 「믿을만하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5%에 불과했다.

이것은 지난해 환경처가 대륙연구소에 조사 의뢰 발표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서도 정부가 발표하는 환경오염수치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76.1%가 「신뢰할 수 없다」거나 「그저 그렇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상통한다.

또 현행 배출허용기준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46%가 「현재가 무방하다」, 45%는 「강화되어야 한다」로 대답해 양분되는 양상을 보여주고도 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환경관리인들은 빈번한 지도단속에 앞서 충분한 기술지도와 상담 및 계몽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단속에 앞서 기술상담 및 계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불충분하다」가 78%, 「보통이다」가 20%를 차지했으며, 「충분하다」는 8백명중 16명에 불과해 2%에 그쳤다.

또한 지도단속과 행정처분의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가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그동안 지도단속권과 행정처분권의 이원화로 파생됐던 제반 문제점들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새로 개정된 관련법규에 따라 지도단속권과 행정처분권이 일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내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의 기술수준을 묻는 질문엔 49%가 「보통이다」, 48%는 「낮다」고 지적, 이분야의 지속적인 기술향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낮게 평가됐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근거로 환경오염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대책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47%가 국민의 인식전환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했고, 그 다음으로 정책강화 31%, 환경업체의 기술향상 11%, 사업주의 협

질문 내용	반응			결과
	만족	보통	불만족	
지도단속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38%	52%	10%	보통 52%
당국의 배출업체의 오염물질 측정결과에 대한 신빙도는	12%	53%	34%	
지도단속에 앞서 기술상담 및 계몽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가	2%	20%	78%	
현행 배출허용기준치에 대한 평가는	강화되어야 한다 45%	현재가 무방하다 46%	완화되어야 한다 9%	
국내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의 기술수준은	높다 3%	보통 49%	낮다 48%	
당국이 발표하는 국내의 환경오염측정치에 대한 신뢰도는	5%	그저 그렇다 51%	믿지 못한다 44%	

조 11%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현재 환경보호정책시행에 대한 평가는 「강하다」가 15%, 「보통이다」가 52%, 그리고 「약하다」가 33%로, 보다 일관성 있고 강력한 정책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는 지난해엔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되고 환경원년을 선포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환경정책상 일련의 변화가 있었지만, 실제적인 면에서는 팔당호 골재채취문제나 대기오염, 폐기물처리문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맹점을 드러낸 환경행정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적으로 이 문제와 유사한 환경처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5.6%가 정부의 환경보전노력이 형식적이거나 그저 그렇다고 대답했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되는 환경관련법제정과 관련, 법의 제·개정시 환경인 및 국민의 의견이 어느정도 수렴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3%만이 「충분히 수렴되고 있다」고 지적해 법의 제·개정시 여론수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환경관련법의 제·개정시

환경인 및 국민의 의견이 어느정도

수렴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3%만이 「충분히 수렴되고 있다」고

지적해 법의 제·개정시

여론수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이는 법규의 제·개정시 관보에 주요 골자를 게재해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는것외엔 의견수렴 기회가 별로 없었던 종전의 관행과 관련이 깊다. 더우기 최근 지난해 제정된 환경관련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는 과정에서도 이렇다할만한 공청회 한번 개최되지 않았고 법규 시행일 당시에서야 시행규칙이 확정되는 등 촉박한 상황을 보인것도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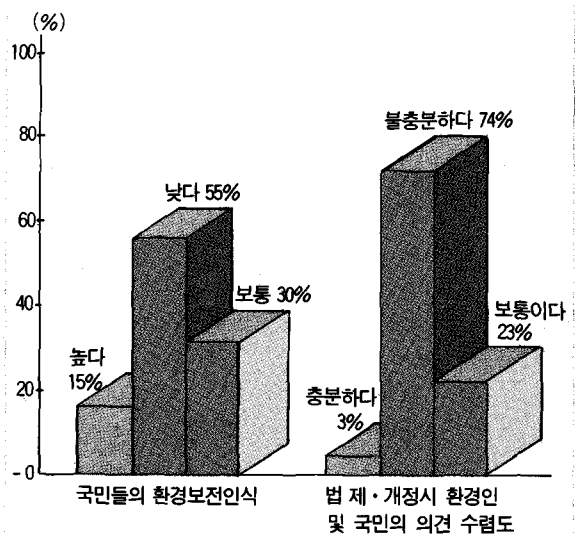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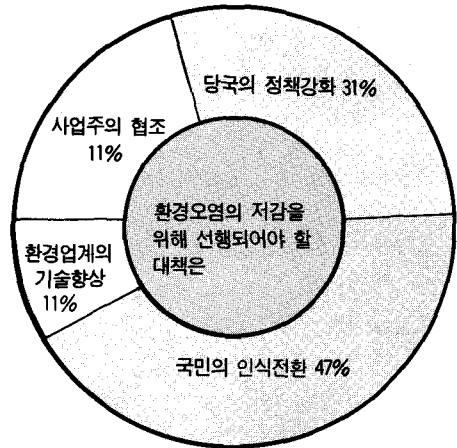
그 누구보다도 변경된 환경관련내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하는 환경관리인들에겐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본회가 환경처에 건의했던 내용중의 하나인 환경관련공무원의 임용방법에 대해서는 88%가 공채를 지지, 해마다 3천여명 배출되고 있는 환경관련전공자등 전문인력에게 공채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부여 및 환경관련공무원의 실력배양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반행정직과는 달리 고유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환경관련공무원의 충원은 다른 부처에서의 이동이 아니라 공채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응답자들의 반응이었다.

한편 지난해에 논란이 일었던 그린벨트 보호에 대한 시각은「강화되어야 한다」가 83%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정책 시행이 재고되어야함을 시사했다.

또한 올해중에 실시되는 지방자치제와 관련, 지자체가 실시되면 지역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라는 물음에는 45%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답을 하고 있어 일단은 지자체를 환영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각기 자기지역 환경을 보전한다는 책임의식아래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는 이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18%는 오히려 「나빠질 것이다」로 답해 지자체 실시와 관련, 지자체로 인한 지역환경의 개선에 대한 기대와 함께 개발이라는 명목아래 각종 파괴와 오염현상이 야기될 수도 있는 지자체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음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오염도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서는 44%가 폐기물오염을 꼽았고 수질·대기분야라고 지적한 응답자는 각각 27%와 29%를 나타냈다.

환경오염피해의 내용으로 대기오염을 우선적으로 꼽은(47%) 환경처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본다면, 환경관리인들의 경우 폐기물처리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풀이된다.



▲ 응답자의 63%가 현재 근무중인 기업내에 환경전담부서가 없다고 대답, 위상정립과도 직결되는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자체 실시 이후의
환경개선문제에 관해서는
55%가 지자체가 지역환경개선에
별도움이 되지 않거나,
나빠질 것으로 전망,
개발로 인해 각종 파괴와 오염현상이
아기될 수 있는
지자체의 역기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폐기물의 양은 하루 7만여톤에 달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하는 업체들은 매립지나 시설부족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함을 시사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지도단속과 행정처분의 일원화문제를 제외하고는 당국에 건의했던 사항 즉, 양벌규정의 폐지 및 개선, 환경전담부서 설치와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환경관련공무원의 공개채용이나 환경정책 수립시 국민 및 환경인들의 의견수렴문제 등은 종전의 설문조사결과와 비교해 볼때 현저히 개선된 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상의 현안문제들이 여전히 희망사항으로만 남아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지도단속에 선행, 충분한 기술지도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폐기물처리문제에 있어서도, 폐기물매립장 선정에서부터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현실을 현대인들의 극도의 이기주의 성향인 NIMBY신드롬 탓으로 돌리기엔 그동안의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오염피해가 많은 물의를 빚어왔다. 때문에 이러한 주민들의 예방투쟁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이에 해결책에 대한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전반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